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음 1월 17일) 제3682호

대표전화(063)288-9700

▶▶ 매일 INDEX

6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통해 데이터 활용 선도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제1차 전북 과학기술위원회

사와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상황실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촉진을 위한 2025년 제1차 전북 과학기술위원회에 김관영 도지 〈관련기사 3면〉

미국發 관세 대응 나섰다

전북자치도, 신속 분석·협력 '통상정책 대응반' 운영
기업 현장간담회 통해 애로사항 청취·정부 대책 건의
금융·세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13일 전북도 기업애로해소과 이은주 과장(사진)은 브리핑을 통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부과, 보편 관세 등 정책 변화를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도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북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 운영 △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실국별 대책 마련 및 유관기관 협력 대응 △지원책 최대화 및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주축으로 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한다.

대응반은 실국을 중심으로 도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 차원의 대응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도 신속하게 추진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각 실국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발빠르게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상공회의소,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 지원책 최대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 수출입 컨설팅, 대체 시장 개척 등이 시급히 필요한 만큼, 기업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 신년 브리핑

'자원 선순환 녹색도시 조성' 비전 3대 목표 제시

'지난해 5월 가스폭발 사고 발생' 전주리싸이클링 타운의 노후 시설교체 시급

전주시가 올 한해 안정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정원·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녹색도시를 구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13일 자원순환녹지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자원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한 청소행정·산림녹지, 공원환경 분야의 3대 목표와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안정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체계적인 녹지정책 및 정원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도심 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산림 및 공원환경 조성이다.

먼저 청소행정 분야에서 시는 지난해 개선된 권역수거체계 청소행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해 청소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적절히 투입해 청소 차량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노사소통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덕진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전주시 대표관광지로 조성하고,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도 전망대, 힐링센터는 물론 초록바위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완산벙커와 연계되는 한옥마을외에 또다른 새로운 관광거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고 '학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도심 속 산림 휴양·관광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산림복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높아진 정원에 대한 관심속에서 △전주 지방정원 조성 △정원식물 지원센터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정원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전문가 양성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제5회 전주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관광자원화도 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노인일자리로 '초록정원관리사' 사업을 본격 추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 전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이 13일 시청에서 신년브리핑을 열고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원순환분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주권 광역 소각자원센터의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을 통해 잔재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광역폐기물매립장 순환이용정비 사업을 통해 매립지 재확보를 추진하는 등 자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인식개선에도 힘쓴다.

한편, 지난해 5월 2일 5명의 사상자가 난 리싸이클링 폭발 사고 당시, 전주시 관계과는 "민간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외주를 주었다 하더라고 주무관청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2월 26~3월 26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도 사업시행자의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 미비에 대한 주무관청으로서 지시-명령 권한 미사용 및 책임 방기를 지적하고 있었다. 당시 노동계와 환경 단체들은 "민간 건설 업체의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전주시 때문에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음에도 전주시 관계과는 여전히 "리싸이클링 안전 점검 등은 시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브리핑에서 담당 국장이 "수시로 직원을 파견해 점검하고 국장 자신도 직접 현장을 살펴 보고 있다"라고 함에도, 해당과는 "리싸이클링 안전 점검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을 할 뿐이다. 전주시 해당과가 법률에 입각한 행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또 상하 간에 행정 의사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 등을 해야 함에도 4개 컨소시엄 업체들 중에는 워크아웃 업체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리가 어렵다고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외주 업체가 수리해야 될 문제이므로 따로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수리 주체가 누구냐 와 관계없이 2024년의 대참사가 재현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지난 1월 7일에도 작업 중인 근로자가 수거용 집게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2025년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올 한해 자원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정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산림 및 공원조성, 정원도시로의 도약 등을 통해 전주시가 더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